

# 네이버 찾은 국민의 힘, 검색 알고리즘 조작·오류 논란 항의

### 한성숙 대표 등 비공개 면담 진행 국감기간 중 지속적 문제점 감시 “네이버측 추미애 장관 검색 오류 사과”

네이버가 검색 조작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네이버 본사를 찾아 최근 불거진 네이버의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 오류 등에 항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성일종·강민국·유의동·윤두현·윤재욱·윤창현·이영 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정희용·허은아 위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네이버 측에서는 한성숙 대표와 채선주 부사장, 유봉석 서비스운영 총괄, 정연아 법무이사, 원윤식 대외 이사, 한재현 홍보이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일종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이버에 27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런 와중에 알고리즘에 관한 여러 의문이 있었다”며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큰 이득을 줄 수 있지만 큰 해악을 줄 수도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4일 오전 포털공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점검을 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에서도 오늘 억울하거나 활동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성숙 대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비공개 면담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날 면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은 “저희가 그동안 끊임 없이 검색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한 결과, 네이버가 뉴스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 그룹에 공개하고 검증받아 신뢰성을 유지하겠다고 했다”며 “쇼핑 관련해서는 경쟁이 심하고 파트너사의

영업 비밀도 있기 때문에 입장을 정돈한 후 조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재욱 의원은 “네이버 측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 오류와 관련해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외압 논란에 대해서도 네이버 임원을 지내신 분이라우려가 있다는 정도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재욱 의원은 “네이버 뉴스·쇼핑의 투명성, 공정성, 윤리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회 내에 전문가 그룹을 설치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감 기간 중 네이버 관련 문제점을 정무위와 과방위 중심으로 집중 감사할 예정”이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19일과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소개한 네이버 모바일 버전의 ‘추미애’ 검색 결과 화면. 19일 검색 결과 카테고리(사진 왼쪽)는 ‘통합, VIEW, 이미지, 지식IN’ 순인 반면, 해당 문제가 기사화되고 난 20일(사진 오른쪽)에는 ‘통합, 뉴스, 실시간, 이미지’ 순으로 바뀌었다고 김근식 위원장은 전했다. /페이스북 캡처

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회 출석도 재차 요구했다. 네이버 창립자인 이 GIO가 참석해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려는 취지에서다. 네이버는 이 GIO 출석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네이버는 최근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포털 외압에 대한 논란으로 잇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과 동영상 영역에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는 이유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영찬 의원이 포털 다음의 야당 관련 뉴스가 우선 노출된 것을 보고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좌관에게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포털의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통상 정치인을 검색할 때 ‘뉴스-이미지-실시간 검색어’ 순서로 나오는 것과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색할 때에만 ‘쇼핑-뉴스-실시간 검색어’ 순으로 노출된다는 검색 결과 오류 의혹도 받았다.

【서울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北 열병식에 불떨어진 軍... 구조개편 현안 부상

### 위리어플랫폼·동원전력 정예화 경쟁 평시복무예비군제도 국정감사 전망

오는 16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열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는 ‘위리어 플랫폼’과 ‘동원전력 정예화’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군구조 개편으로 인한 병력감축과 인구절벽에 대비해 육군이 풀어야 할 주요과제이기 때문이다.

1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낙후된 육군의 개인전투장비 개선사업인 위리어플랫폼과 상비군 감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평시복무예비군제도의 추진경과 및 문제점들이 육군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오후 녹화방송으로 공개한 북한군 개인전투장비가 자국이 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육군은 지난 2017년 개인전투장비를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위리어플랫폼’을 추진하



위리어플랫폼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뉴얼 전투복 시제품을 착용한 육군참모총장 시절의 서욱 국방부 장관, 지난해 열병식에 공개된 중국인민해방군의 19식 장비,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군(왼쪽부터) /문형철 기자

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추진성과에 대해서 크게 알려진 바 없다.

김찬우 특수작전연구회(LANDSO C-K) 연구원은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군은 미군과 유사한 멀티캠(MULTICAM) 위장패턴의 전투복 및 장구류, 야

간표적지시기 및 광학장비, 웨어러블 장비를 착용한 대규모 병력을 보여줬다”면서 “그 성능과 진품여부는 뒤로 하더라도, 중국을 통해 이러한 개인전투장비를 신속히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육군 국정감사에서는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군 신형전투복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19식 전투복과 유사하다고 지적받은 육군과 국방부가 추진하는 위리어플랫폼 전투복, 계절별 환경에 맞게 착용되는 레어링 시스템, 방탄복 및 방탄헬멧, 소총성능개선을 광학장비 등에 대한 전반이 도마위에 놓여질 것으로 보여진다.

군 소식통들은 이와 함께 하사 이상 소령 이하 예비역 간부들이 연 15일 내외로 비상근로 복무하는 ‘평시복무예비군’의 복무확대와 실질적인 정예화 지원방안 등도 육군 국정감사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n@

## 카드론 이용자 절반, 빚으로 빚 돌려막아

###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 “다중채무자 재기 방안 강화해야”

평균 연 14%의 고금리인 장기카드 대출(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통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의 부실이 카드사 부실로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연체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론 잔액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전체 카드론 이용자 260만 3541명 중 56.1%에 달하는 146만 27명이 3개 이상 기관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론 다중채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개사 이상에서 카드론을 이용

한 채무자는 2015년 189만 5074명에서 지난해 258만 3188명으로 36%가량 증가했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에만 146만 26명에 달하는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미뤄 볼때 연말까지 다중채무자 수는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 의원은 “다중 채무자의 부실이 카드사 간 연쇄 부실로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연체율 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동시에 다중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재기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 유학 가장한 불법체류자, 5년만에 4배 ↑

###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 유학생 늘리기 나선 대학상황 악용

#서울 소재 A대학이 지난 2015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모집을 위해 현지 유학 알선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1인당 등록금 납부액 20%를 유학 업체에 사례금 명목으로 냈다가 지난 6월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A대학은 유학생 모집 실적 568명에 대한 총 3억 3254만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현지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연수 중인 외국인 128명의 실제 출석률이 70%가 되지 않음에도 출석률이 70% 이상으로 기재된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발급한 B 대학 교직원 2명 및 유학생 담당 외국인 1명이 지난 1월 적발됐다. 이들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한국어 연수생 148명에 대해서도 마치 등록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납부증명서를 발급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받게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류 경로로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늘어나면서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유학생(D-2) 및 어학연수비자(D-4-1, D-4-7) 불법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유학생-어학연수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 3631명이다. 2015년(5879명) 대비 4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베트남 유학생은 15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 16만 165명 중 13.7%인 2만 1970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불법체류 등 출입국사범은 4715명으로 4년새 2.4배 증가했다.

한편 유학생 비자(D계열)로 국내에 온 외국인 중 ▲2017년 211명 ▲2018년 476명 ▲2019년 346명이 난민 신청했지만, 난민 재판의 0.1%만 난민 신청자가 승소했다. 유학비자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 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현진 기자 ihj@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입학 정원이 감소하고,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이어지면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무분별하게 뛰어 들고 있는 대학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명을 넘어섰다. 2000년에는 불과 3980명으로 지난 20년간 외국인 유학생은 4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유학생 늘리기에 급급한 대학들의 상황을 악용해 유학 비자를 불법체